

2025 ESG 트렌드 리딩: ESG DX의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일시: 2025년 2월 26일 14:00 - 15:00

주최, 주관: i-ESG

발표

김종웅 i-ESG 대표

사전 질의응답

현장 질의응답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본 웨비나는 2025년 ESG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규제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임.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따라 EU 공급망 실사법, CSRD 공시 지침 등의 시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ESG 데이터 관리 및 디지털 전환(DX)의 필요성이 강조됨. 또한 2025년 예상되는 ESG 트렌드 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key takeaway 1

2025년 ESG 규제 강화 및 기업 대응 필요성

- 글로벌 ESG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025~2026년은 기업들에게 본격적인 규제가 작동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
- 특히 EU 공급망 실사법(CSDDD) 등의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 기업들의 ESG 대응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하여 ESG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key takeaway 2

ESG 데이터 관리 및 디지털 전환(DX)의 필요성

- ESG 규제가 자발적 영역에서 규제의 영역으로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ESG 데이터 수집, 정량화,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기업들은 수작업 기반의 ESG 대응에서 벗어나,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ESG 특화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여 ESG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ESG 공시 자동화 등에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key takeaway 3

ESG 트렌드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 미국의 반(反) ESG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심으로 ESG 공시 및 규제 강화 흐름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ESG 공시 기준을 준수하고, 규제 리스크를 줄이며,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
- 국내 기업들도 ESG 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관리, 공시 의무화 대비, ESG 디지털 솔루션 도입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종웅 i-ESG 대표

2025년 ESG 트렌드 리딩

(ESG개념과 그 확산 배경)

ESG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일컫는 용어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와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개념하는 용어임. 막연하게 느껴지는 ESG 개념에 대해 현재 시장에서는 수치화와 정량화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글로벌리서치에 따르면 매년 기상 이변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약 300조원을 넘어가고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는 현실이 됨. 과거처럼 자발적 영역에서 모든 기업들이 스스로 자라기를 기대하기에는 기후위기가 ESG 관련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 ESG는 더 이상 자발적 영역이 아닌 규제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변화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ESG 규제 155% 증가. UN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100건 이상 ESG 규제가 글로벌에서 발효되어 있는 상황임.

(EU 공급망 실사법 사례)

ESG는 점차 규제화되어 있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짐. 세계 정부가 각국 정부에게 그리고 각국 정부가 대기업을 그러면 대기업을 공급망 상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ESG 관련 대응을 요청하고 있고 이것들이 규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EU 공급망 실사법은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EU 기업과 제3국 기업 중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한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임. 관련 공급망 상에서 ESG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사 의무를 가진 기업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

공급망에는 기업 자체, 직접 공급자는 물론이고 간접 공급자도 공급망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국내 회사가 직접 유럽이나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U 공급망 실사법의 관점에서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음. 만약 우리가 EU에 있는 기업이고 우리 공급망상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에게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사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 이러다보니 당연히 우리 공급망 기업들에게 ESG 대응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눈 여겨 봐야할 ESG 주요 규제)

먼저 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EU 차원에서 24년에 발표가 되었음. 26년까지 EU 각 국가 차원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될 예정. EU의 공시지침인 CSRD는 EU 차원에서 24년에 발표가 되었고 26년까지 EU 각 국가 차원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될 예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전환기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임.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SEC 기후공시규정이라든가, 청정경쟁법(CCA) 등이 대표적인 규제론 거론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간 미뤄졌던 ESG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일정 등이 올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이런 규제에 미대응했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공공 조달 입찰이 제한되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요구됨.

(자본시장의 움직임)

시장에서는 ESG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음. 미국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에서 탈퇴를 선언했음. 연이어 대규모 투자 기관들도 탈퇴하는 등 ESG에 대한 후퇴 움직임이 분명히 시장에서 보이고 있음.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24년 말 기준으로 ESG 펀드 자산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블랙록은 여전히 600조원 이상의 ESG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속 가능 펀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리브랜딩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ESG 기반의 펀드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님.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유럽 주도의 지속 가능 펀드들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자금 조달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 기업들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녹색금융이 확대되고 있음.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자체적인 ESG나 탈탄소 대응을 다 내재화한다라는 게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전환 금융도 자본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

(ESG 그린 워싱)

기업 차원의 ESG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ESG 관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음. 일부 부작용도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시가 그린워싱.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엑손모빌을 상대로 고소했다거나 콜스나 월마트가 그린워싱으로 기소돼서 약 73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들이 있음.

그린 워싱을 막고자 시장에서는 사실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ESG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음.

(2025년 주목할 10가지 ESG 트렌드)

주목할만한 10가지 ESG 트렌드에는 ▲정책, ▲에너지 전환, ▲물리적 기후 리스크, ▲기후 금융, ▲탄소 시장, ▲자연, ▲공급망, ▲정의로운 전환, ▲인공지능, ▲지속가능성 보고가 있음.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에서는 탈탄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 안보나 경제성 관점에서 기존의 화석연료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좀 작동할 수 있음.

앞으로 탄소 시장(Carbon Markets)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탄소배출권 시장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이 확대되면서 매우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SMP는 전망하고 있음.

공급망(Supply Chains)은 지정학적, 규제적, 기후적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압박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됨. 이 부분이 시사하는 것은 이제 대규모 수출 기업,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속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ESG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요구 확대. 단, 기업의 보고 부담 측면에서 도입의 지연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이미 다수의 상장 거래소에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보고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들이 정립되어 감에 따라서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 보고 제도를 수용해서 공시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임.

(2025년 가시화된 미국의 ESG 정책 변화)

다만 적극적인 반ESG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도 각각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 주도의 여러 글로벌 규제가 전면적으로 일괄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상황. 큰 틀에서는 ESG 강화 기조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2025년 이후의 트렌드를 해석할 수 있음.

(ESG 대응의 핵심)

한국은 현재 관련 ESG 규제가 없는 상황임.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은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많은 규제들이 작동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님.

ESG 대응을 잘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임. 기업들은 현재 매우 상세한 데이터 공개를 지속 요구 받고 있음. 특정 부서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생산, 재무, 인사, 전략 그리고 구매, 영업 등 다양한 부서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고 본사는 물론이고 자회사 그리고 공급사 데이터까지 함께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현재 ESG Digital Transformation 시장 상황)

하지만 현재 시장의 표준이라 할 만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 요구 사항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이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전문 역량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내부 조직을 갖추고 있더라도 기존의 엑셀과 같은 수작업 방식이나 고비용 컨설팅에 의존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데이터 관리 공개 평가 대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려움

(ESG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 시 필수 고려사항)

ESG 특화 디지털 솔루션은 신속한 도입과 확장성,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함. 데이터의 통합과 분석이 효율화되며, 기업들에게는 동종업계 우열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이 과정에서 글로벌 프레임워크나 규제랑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함. 또한 회사 안의 시스템이 아니라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중 어떤 것이 우리 회사 관점에서 효용이 있는지, 최신 AI나 빅데이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ESG 데이터를 ERP시스템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내부 시스템과 자동 연결하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검토해야 함.

(ESG DX의 타이밍)

시장에 공개된 ESG 표준화 솔루션을 활용하는 경우, 기업은 틀에 익숙해지는 초기 과정을 거친 뒤 빠르면 6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함.

한편,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표준화 모델을 기반으로 자사에 필요한 관리 항목을 추가 개발하는 커스터마이징 방식은 내부 기획 및 데이터 세팅, 연계 솔루션 개발 등의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 적용 기간이 약 12개월 수준으로 확대됨.

ESG 관리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기획·개발·운영하는 방식의 경우, 초기 기획부터 ESG 데이터 정비, 개발, QA 및 내재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실제로는 2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함.

따라서 ESG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까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함.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2025~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글로벌 ESG 규제를 고려해, 역산 관점에서 대응 시점을 정하고 조속한 계획 수립 및 솔루션 도입 검토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i-ESG 솔루션)

i-ESG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데 집중함. 기존에 흩어져 있던 관리를 손쉽게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좀 낮추면서 투자금의 한계를 해소. 나아가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빠르게 식별하는데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음.

솔루션의 기능 중 AI 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ESG 공시와 관련해서, 기업이 여러 ESG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회사 목적에 부합한 공시 기준 추천은 물론, 회사 정보에 기초해서 맞춤형 ESG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음.

사전 질의응답

Q. 25년 이후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나.

A. 25년과 26년은 ESG 관점에서 본격적인 규제가 작동하는 중요한 시기임. 우리 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를 전부 학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므로 우리 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가 뭔지, 그리고 그 규제 안에서 우리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Q. 중소기업 관점에서 ESG 준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A. 회사의 ESG 준비 현황을 파악하는 우선. 글로벌 평가나 진단 기관들이 주로 요구하는 진단 항목들에서 보편적으로 빈도수 기반으로 봤을 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음. 이런 진단 항목에 맞춰서 시장의 요구 사항을 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이후 ESG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책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등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상세한 데이터 관리로 확대해 가야함.

Q. ESG 데이터 관리 이외에 ESG 영역에서 DX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A. 이미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ERP 시스템을 운영하면 ESG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들을 이미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데이터 통합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 DX 관점에서 AI 에이전트 같은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회사의 기술 현황을 우리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개선점 도출하는 부분도 DX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현장 질의응답

Q. 한국은 현재 공시 의무화, 가이드라인만 있고 규제는 아직 없는 상태인가?

A. 현재 공시 의무화는 과거에 25년부터 상장사의 큰 규모부터 순차적으로 2030년까지 확대되는 것이 기본안이었다가 2026년 이후로 유예한다고 발표가 되었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서 올해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시에 대한 의무화를 포함해서 규제적인 측면들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Q. ESG분야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펌이나 컨설턴트들과 i-ESG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음. 좋은 레퍼런스가 있나.

A. 굉장히 많음. i-ESG는 ESG 특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분석 측면에 집중하고 있고, ESG가 광범위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 컨설팅에 대한 니즈가 있음. 시장에서 요구 사항이 바뀌거나 규제가 바뀌었을 때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음.

Q. ESG 담당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 자격증도 제조, 유통, 금융, IT 등 분야에 따라 다른가.

A. 사실 ESG 분야는 여러 협업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을 회사 차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함. 현재 기업들의 실정을 보면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팀, 어떤 곳은 전략팀, 인사팀이 하는 곳들도 있어 꼭 전담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TF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음. 이후에 관련해서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좋으며, 현재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ESG를 잘한다는 부분은 아직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조사 및 작성

임팩트온 정예은 RA

j91780257@gmail.com